

야권, 국방부 '홍범도 홍상 이전 시도' 비판 “반역사·반민족적 폭거”

박광온 민주 원내대표 “장관에 합당한 책임 물을 것”
이낙연 전 총리, SNS 통해 “얼빠진 폭주 당장 멈추라”

야권은 28일 일제히 국방부의 육군 사관학교 내 독립운동가 홍상 이전 시도를 비판했다. 일부는 이를 반역사·반민족적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정부와 각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 때 국정 교과서 논란이 생각났다”며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라고 밝혔다. 이어 “건국절 논란, 친일 논란, 국정 교과서 논란, 이제는 독립군 홍상 제거”라며 “윤석열 정부 격정된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독립군 홍상 이전을 “대한민국

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우는 반역사·반민족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군의 근간이 되는 육사는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그 정체성”이라며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홍 장군을 독립유공자로 예우했다”고 언급했다. 정부·여당을 겨냥해서는 “국민의힘이 나서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홍상 이전 계획을 취소시키기 바란다”며 “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인 국방부 장관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겠다”고 경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나라를 팔아먹은 자만 미국노가 아니다”며 “민족의 혼과

열을 능멸하고 독립 영웅들을 흠대하는 것도 매국 행위다 역사를 팔아먹는 반민족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번 파문은 무밭할 것도 없이 국방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과할 일”이라고 압박했다. 다른 야권 인사들도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얼빠진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우리는 항일독립투쟁의 역사를 최대한 넓게 포용하려고 노력해왔다”며 “2021년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온 것도 그런 노력의 연장 이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고 체제의 우월성”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번 처사는 대한민국의 그런 정통성과 우월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편협한 이념으로 만사를 제단하려는 위험한 폭주로 국가와 역사를 어디까지 망가뜨리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건국의 한법정신을 부정하고,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정부와 군의 폭거”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나라를 지키는 군과, 군인을 키우는 육사에서 왜곡된 역사관과 한법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매우 위험한 반국군 반역사적 행위를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며 “벌써부터 국방부와 육사가 판단할 일이라고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인데 그렇게 국방부와 육사의 행위를 옹호하려는 모습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스



제99주년 삼일절인 지난 2018년 3월 1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독립전쟁 영웅 5인 홍상 제막식 모습.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왼쪽부터), 지청천, 신홍무관학교 설립자 이희영 선생, 독립전쟁 영웅 이범석, 김좌진 장군의 홍상은 장병들이 훈련한 탄피 300kg(소총탄 5만 여발 분량)을 녹여 제작했다.

민주, 국힘에 오염수 방류 관련 공개토론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며 국민의 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대책위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골든타임이 정쟁의 시작이 아닌 정쟁의 끝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대책위는 “원전 사고로 생긴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아무리 과학적 검

증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에 기인한 불안감은 해소하기 쉽지 않다. 다핵종저배설비(ALPS)가 걸러주지 못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에 대해 엇갈리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바실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는 전문가가 있는 반면 그 위험성을 우려하는 많은 전문가도 있다. 정부 입장을 같이 한다고 ‘과학’이라고 부르고 정부 입장과 다른 건 ‘과학’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전까지는 후

쿠시마 오염수 대응이 지금과 같은 정쟁의 소재가 아니었다”며 “정권이 바뀌자 국민의힘 입장이 바뀌었다”고도 주장했다. 대책위는 “2021년 6월 29일 국회는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여야가 합심해서 통과시켰다”며 “정권이 바뀌자 국민의힘 입장이 바뀐 것이지 원전 오염수가 갑자기 안전해진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당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토론을 통해 안전성 평가, 정부 대응 평가, 피해 지원책 등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뉴스

“국민 기대부응했는지 아쉬워... 큰 책임감”

민주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 맞아
“민생 도탄 빠져... 정국회서 책무 막중”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안겨준 국민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이 그야말로 도탄에 빠졌다. 국가 운영에 기본적인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민주당의 책무가 참으로 막중하다”고 했다. 그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권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마련해야겠다”며 “벼랑 끝에 몰린 국민 삶을 위한 책임감은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당 민심을 받드는 국회로 거듭나는 유일한 기회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나라 안팎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며 “그런 만큼 더 치밀하게 정국회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목표 과제 또한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이가 “민생 중심의 입법과 재정에 책임있는 역할에 대해 당력을 총 집중하고 국민적 의욕이 있는 사안들의 진상규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정국국회에 당의 미래와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 묶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29일까지 진행된다. /뉴스

“동학에 대한 무관심·무지 ‘심각’”

염영선 도의원,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공청회 열어
전북도 동학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 등 제안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정응)이 28일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확산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염영선 의원은 “1894년 반봉건·반외세를 주창한 동학농민혁명은 세계적 사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효시이지만 동학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심각한 수준으로 그 가치를 계승하고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청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문병하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기획운영부장이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확산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도·교육청 협력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이한운 전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이민석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학예사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이 28일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확산을 위한 공청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고 있다.

오현숙 도의원, “성범죄 사건 발생시 피해자 특별휴가 명시”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사건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령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령안’은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전라북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라 사건 조사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임의로 휴가 조치를 하고 있었으나 ‘전북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연가, 병가 등을 혼재해서 사용하는 등 부부가 불안정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문해 결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도 반영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고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